

대외경제전문가 「풀」 북한경제연구회 결과보고

2004. 8. 30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I. 행사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4. 8. 24. 16:30 ~ 18:30

☐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2. 주제 및 일정

가. 발표주제

1)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 발표자: 경남대학교 양문수 교수

2)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과제

- 발표자: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

나. 회의 진행 순서

☐ 16 : 30~17 : 30 주제발표

☐ 17 : 30~18 : 30 자유토론

3. 참석자 명단

☐ 양문수, 경남대학교 교수

☐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이정철 삼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 정청현 중앙일보 기자
- ☐ 김병권 통일뉴스 기자
- ☐ 이창학 KOTRA 북한팀 대리
- ☐ 남미림 주한미국대사관 경제담당관
- ☐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 이종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 이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Ⅱ. 주요 논의사항

1. 북한의 종합시장

- ☐ 북한은 2003년 3월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 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음.
- 기존 농민시장의 증·개축으로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상

품유통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

□ 북한의 종합시장에 대한 물품의 유입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농민시
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농민시장은 198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암거래가 늘어났
고 특히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 암거래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
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했음.
- 현재 종합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던
품목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동시에 제품의 공급자가 그 제품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생산, 수입 등)의 합
법 여부도 크게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종합시장이 기
존 암시장의 합법화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종합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을 놓고, 그 가격의 성격을 국정가격으로
볼 것이냐 시장가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종합시장의 성
격, 즉 계획이냐 시장이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됨.

- 종합시장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한편으로는
당국이 가격에 대해 일정 정도의 통제(가격의 상한선 설정)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한도가격 혹은 가격상한선을
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상황을 보아가며 주기적 혹
은 비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시장의 등장과 함께 시장 내 전문상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공식적으로 기존 농민시장은 전문적인 상업기관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새로운 ‘종합시장’의 등장은 전문적인 상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상인으로서는 개인 뿐 아니라 기관, 기업소의 판매관련 조직도 허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다만 현재로서는 기존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하던 사람이 대중을 이루고 있음.

□ 한편,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의 운영에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세금 징수에 힘을 쏟고 있음.

- 조선신보는 “시장은 상품을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별적 주민들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는 이것과는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에 바쳐야 한다”고 전하고 있음.
- 탈북자들도 실제로 두 가지 명목의 세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평양의 경우, 전자는 만원 안팎이고 후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한데 하루에 공업품 500원, 육류 300원 등이라고 함.

□ 종합시장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 생산측면에서의 파급효과
 -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의 공간이 대폭 확대되었음. 7·1 조치로 기업에 대해 계획외 생산과 계획외 처분(시장판매)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이 더욱 확대된 것임.
 -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시장판매 생산을 더욱 자극하는 유인으로 작용했음.
 - 북한산과 수입품과의 경쟁 및 개인 부업생산(개인수공업)의 확대를 초래했음
- 유통측면에서의 파급효과
 - 무역기관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輸入)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7·1 조치 및 종합시장 도입 이후 외국과 직접 무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다 많은 기관·기업소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이는 수입품의 종합시장 유입 확대로 이어졌음.

- 기관, 기업소의 무역 수행에 개인자본이 들어갈 여지가 확대되었음.
- 한편 종합시장의 도입 이후 변화가 불가피한 부문이 국영상점인데, 현재 국영상점들은 시장화쪽으로 생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결론적으로 북한의 시장개설 조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이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증대라 한다면 이 측면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기대 가능함.

- 예컨대 종합시장용 생산은 그 자체뿐 아니라 국영상점용 생산의 계획목표 달성에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전망이며, 동시에 시장을 배경으로 전문상인의 등장은 기존의 국영상점 유통망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앞설 것으로 보임.
- 물론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또한 경제의 내부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제도개혁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부인 곤란함. 이와 관련, 올 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시장 물가가 올 봄 이후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에 주목해야 함.
- 한편으로 종합시장 정책의 목적이 재정난의 완화,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있다면 이 또한 부분적인 성과는 기대 가능함.

□ 반면 종합시장 도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쌍궤제 경험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각종 투기와 부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공급원천의 합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임.
- 더 큰 문제는 향후 종합시장 발달에 따라 국영상점망의 위축, 국영상점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수공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시장경제질서의 확산 및 공식부문의 침식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 개성경제특구

□ 개성공단사업은 최근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본계약 체결과 준공식 개최로 개성 공단에서의 연내 시제품 생산이 가시권에 들어감.

- 북핵 문제 지연 속에서도 남북 양측은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경제와 군사 측면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협 확대를 위한 추동력이 커지고 있음.

- 금년 6월말에는 공단 관리기관 이사장 내정에 이어 시범단지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하였음.

□ 북한경제는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이 절실한 가운데,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헌법 개정과 7.1 조치,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의 내부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원의 고갈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 특구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미흡함. 자력갱생의 경제 회생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중에 있지만, 북미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일 교섭과 나진·선봉지대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의 지연 등으로 서방국의 외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함.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서방국들의 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체제 경쟁 우려 속에서도 남한 자본 유치를 위해 휴전선 인접의 북한 최남단 지역인 금강산·개성 지역을 특구로 개방하는 대담한 조치를 단행함.

□ 개성공업지구 개발은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은 물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타개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상생(win-win)의 협력 사업임.

- 관광 차원의 단순 외화벌이가 아니라,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 회생에 절대적인 역할 기대됨.
-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에 새로운 산업 입지 개발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거점(hub)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자 유치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함.
- 중장기적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남한에게 대륙과 동북아 경협 확대의 교두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함.

□ 개성공단의 3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가동되는 9년차까지 북측의 경제적 효과는 총 96억 달러로 북한 예산과 무역액의 4배와 맞먹는 효과가 기대됨.

- 총 46.7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2002년 북한 예산 98.1억 달러의 47.6%, 무역액 22.6억 달러의 2배에 달해, 북한 경제 회생의 최대 종자돈이 될 것임.
- 인프라 효과로는 공장 건축물을 포함하여 총 49.3억 달러의 효과가 기대됨.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제외시켰던 기계 및 설비투자 효과(200억 달러 × 24% = 48억 달러)까지 고려하면, 총 경제적 효과는 144.0억 달러가 예상됨.
- 산업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8.7억 달러로 예상되며, 9년간 누계의 고용 및 수출 효과는 각각 약 100만 명과 638억 달러에 달함.
- 완공 후에는 매년 12.8억 달러의 직접 외화 수입과 200억 달러의 수출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는 2002년 무역액의 8.8배, GNI 170억 달러의 1.2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한편, 개성공단은 남측에게는 제조 원가 10% 절감 효과와 GDP 2.4% 포인트 상승 효과를 비롯하여,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인건비 절감은 신도시 건설 여부에 따라 210~237억 달러의 효과가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제조업 기준으로 전체 제조 원가의 9.6% 인하 효과가 기대됨.

- 신도시 건설 여부에 따라 생산 유발 효과는 182~347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8~148억 달러로 예상됨.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003년 GDP(6,052억 달러) 기준으로 최대 2.4% 포인트 증대 효과임.

□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통일 경제적’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함.

- 단기적으로 남북간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속에서, 공동의 이익 모델 창출을 통해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남북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해결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해결하는 ‘先易後難’과 ‘存異求同’의 자세와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虎視牛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대남 의존도 심화를 통해 경협의 지렛대 역할을 제고시켜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경제적 및 지역 공동체적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정부는 남북경협의 목표를 상생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